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599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7. 2. 6.
4. 회부일자 : 2017. 2. 7.

II. 제안이유

- 각급 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과 체험학습 공간 제공으로 살아있는 에너지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임.

III. 주요내용(사업개요)

1. 추진방식 : 협동조합형
2. 시설형태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구조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시설
3. 건물현황 및 시행자

순	학교명	건물명	건축연도 (건물연령)	건물 등급	옥상면적 (m ²)	시 행 자
1	상계고	본관동	1987 (29년)	B	1,914	노원햇빛과바람발전 협동조합

4. 사업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건물명	설치면적 (m ²)	발전용량 (kW)	연간발전량 (kWh)	건설비	연 간 사용료
상계고	본관동	426.8	70.2	81,993	117,000	2,106

5. 사용·수익허가 조건

- 사용료 : 금2,106천원(30,000원×70.2kW=2,106,000원)
- 허가기간은 10년(10년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1회 연장 여부 결정)
- 사용 종료 후 영구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단, 사업기간 내 매각이나 대수선 등의 대상이 된 경우 영구시설물 즉시 철거 및 시설물 철거비용 예치 조건
 - ※ 사업종료 시 계속 사용이 철거보다 교육 및 경제적으로 유익할 경우 철거비용 예치 없이 기부채납 예정

6. 건물 구조검토, 설계, 건설, 학생안전시설 등 소요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

7. 시설물에 대한 대물·대인 보험가입은 시행자 부담 예정

8. 하자보수기간은 사용허가 기간과 같음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기 타 :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동의안은 2017년 2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99호로 제출되어 2017년 2월 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동의안은 상계고등학교의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출경위에 대한 검토

- 상계고등학교 햇빛발전소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그동안 시의회에서 심의한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에너지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 측면에서 설치되는 것입니다.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립학교의 유휴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¹⁾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²⁾.

- 또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금번에 제출된 상계고등학교(노원구 상계동 소재)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은 2016년 5월 20일에 개최된 2016학년도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햇빛발전소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상계고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상계고 본관동 옥상면적 1,914㎡ 중 426.8㎡를 활용하여 70.2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동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건물안전도 B등급³⁾을 받았는바, 동 건물 옥상에 동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태양광구조물의 하중의 증가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 햇빛발전소 구조 검토 결과⁴⁾

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건물연령)	건물 등급	옥상면 적(㎡)	설치면 적(㎡)	결 과
상계고	교사동	1987 (29년)	B	1,914	426.8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상계고등학교는 햇빛발전소 시행자인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으로부터 햇빛발전소 설치 최초허가일로부터 10년간⁵⁾ 연간 2백 11만원의 사용료(kw당 30,000원⁶⁾)를 징수하고,

1)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영구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상 해체·철거 또는 운반 등이 용이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자연그대로 방치하면 통상 영구적으로 존치할 것이 예정되는 시설물 중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기관에서 해당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의 협조 없이는 직접 철거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그 철거 비용이 수반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전번호 05-0051), 태양광 발전시설은 관련 규정에서 모듈지지대의 고정(지지대와 연결부, 기초지지대의 용접 및 볼트·너트 조임) 및 접지공사를 하여 지중화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국민신문고 안전행정부<2013.7.3> 및 산업통상자원부 답변<2013.7.9>).

2)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상계고등학교 태양광발전소 설치관련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2017.1.9., 제일구조주식회사)

4)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434(2017.2.1.)

5) 최초 10년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1회 연장 여부 결정

시행자는 설치비용(1억 17백만원)과 허가기간 종료 후 동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및 안전진단·안전시설 및 하자보수 등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계고는 학교내 유휴공간인 본관동 옥상을 활용하여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매년 시행자로부터의 시설사용료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햇빛발전소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⁷⁾ 지급받는 한편,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과 학생 안전시설 등 소요비용은 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바,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함께 학교의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동 시설물이 설치되는 상계고 본관동은 햇빛발전소가 설치될 수 있는 B등급이나, 해당건물의 건축연도는 1987년으로 증축된 지 30년이 지난 구조물로써, 서울시교육청과 상계고는 햇빛발전소의 설치·운영과정에서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인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공고」(2017.1.19.)

- 사용료 및 대부료

적용기간	사용료 및 대부료(단위: kW·년)
2017년	○ 설비용량 100kW 초과 : 35,000원 ○ 설비용량 100kW 이하 : 30,000원

※ 설비용량(kW)은 발전사업 사용전 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사용료 및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7) 2017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햇빛발전소 설치학교 운영비 지원-440,000천원(교당 4,000천원)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장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

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79호, 2016.3.22., 타법개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총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6.7.7.] [서울특별시조례 제6259호, 2016.7.7., 전부개정]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2.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감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학교는 미리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